

노후주택 누전 화재 무방비...광주서 80대 노부부 참변

서구 쌍촌동 2층 단독주택 불 20분만에 진화 했지만 숨진채 발견 광주주택 3채중 1채 노후...누전점검 서비스 몰라서 이용못해 광주 지난해 전기 요인 화재 146건...당국, 교육·점검 지원 등 시급

광주시 서구의 노후 주택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노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유족에 따르면 43년 전에 지은 주택에 살던 이들 부부는 누전으로 차단기가 번번이 내려갔음에도 가정 형편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했다.

25일 광주서부소방·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불과 20여분만에 꺼졌으나 A(80)씨와 B(여·79)씨 부부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주택 1층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09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인 조사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건물 1층의 방에 걸린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누전이 발생해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거동이 불편해 20여 년 동안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B씨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데다 소득이 없어 월 70만원 수준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했다. 동거 중인 딸 C씨 또한 보증 문제로 재산을 잃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A씨는 녀석지 않은 형편 때문에 전기 안전점검을 받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주택은 지난 1981년 지은 노후 주택으로 그동안 수차례 누전차단기가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연평균 180건에 달하는 전기 관련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광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2019년 210건, 2020년 18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5건, 2023년 146건이 발생했다.

이 중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9년 5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이었다.

누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선이나 전기 장치가 노후해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게 대표적이다. 소방본부는 낡고 전기 안전 관리가 미흡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토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광주 지역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총 15만 4104동이며 이 중 4만 5817동(29.7%)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광주에 8만 5107동이 있으며, 이 중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4만 4342동(54.1%)에 달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후 주택 거주자들이 누전을 알면서도 배선을 교체하는 등 수리·점검에 나서지 않는 사례가 적잖다”고 우려했다.

전기안전 공사에 누전 위험을 진단하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월 평균 100여건씩 접수되지만, 이 중 노후 주택 안전점검 신청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신청 건수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안전진단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안전 진단을 받으면 해당 주택이 계약한 전력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안전점검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전기안전 공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119 무료 응급조치 서비스도 시행 중이나, 이 서비스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는 “노후 주택은 누전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에 노출돼 있는 더 세심하게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늘리고 전기안전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국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점검부장은 “누전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으로 즉시 연락해 안전 진단을 받거나 전류가 새는 곳을 수리해야 한다”며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수시 점검하는 등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기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25일 광주서부소방 등 합동감식반이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래방 여 종업원 살해한 60대 향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고법, 우발 살인 주장 기각

고흥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가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8시10분께 고흥

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여·5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3년 전부터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져오다 이상적 호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초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 A씨는 공업용 둔기를 들고 B씨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와 유흥주점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결국 범행 당일 주점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교제 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토킹 행위를 하다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도구인 흉기를 사전에 구입해 집에 뒀다가 범행당일 오전부터 소지하고 하루종일 일정을 소화한 점, 점퍼 안 주머니 보다 큰 흉기를 소지하기 위해 내피를 일부 찢은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장장 짓게해주겠다” 수역원 뇌물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 항소심서 법정 구속

‘화장장 설치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역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고흥군청 간부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67)씨와 건설업자 B(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에서 이들에게 선고한 각각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보석도 취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뇌물공여)로 같이 재판을 받은 C(68)씨에게는 1심의 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억 2000만원과 추징금 1억 1000여만원을 부과했고, B씨에게는 12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장 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163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화장장 사업자 C씨에게 A씨를 소개하면서 “군수의 오른팔이다. 그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직 후에도 C씨에게 “화장장 설치 허가를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다”며 수차례 사례금과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넬 때마다 기록했다’며 제출한 수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첩 메모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고 일부 내용에서 수수관계가 다른 점, 수첩을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수첩에 다양한 필기구를 사용해 메모를 남겼으나 필기구 종류가 다양할수록 신뢰가 높아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수사정보 유출 경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경찰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404호에서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 B씨와 전직 경찰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년 6월과 함께 추징금 각 1000만원과 1억원을 부과해달라고 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당시, 전직 경찰과 범조 관계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고교 선배인 B씨는 사건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후배인 A씨의 사건 관련자로부터 역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운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